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2시간 지연

서울역에서 두 팀으로 나뉘어 지하철 탑승 시위 '4호선→5호선→9호선·4호선→2호선' 양방향

추석 연휴 이후 첫 출근길에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서 서울 지하철 2·4·5·9호선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이날 전장연은 4호선 탑승을 시작으로 2·5호선을 이용해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이동하면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

전장연은 13일 오전 7시54분께 4호선 삼각지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제36차 출근길 지하철탑승 시위를 시작했다. 두 팀으로 나뉜 전장연 시위대는 각각 오전 10시37분께 국회의사당역과 오후 12시2분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시위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4호선 상행 45분·하행 24분, 5호선 상행 12분, 2호선 내선 2시간55분·외선 6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9호선 열차 운행은 지연되지 않았다.

탑승 시위에 앞서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는 지하철을 타면서 시민들에게 의치고 싶다. 우리는 청와대, 국회, 지자체도 수없이 다녔다. 그 결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장애인에게 사는 세상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며 "시민들은 잠시 불편하겠지만 예산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도 "시민에게 죄송하다. 그리고 시민에게 호소드린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삶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독한 불평등과 차별 해소하는 장애인 권리예산, 이제 정치가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34명을 포함한 단체 관계자 70여명은 이날 두 팀으로 나뉘어 각각 2호선, 5호선으로 환승한 뒤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한 팀은 4호선 삼각지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이동해 5호선으로 환승, 여의도역으로 이동했다. 이후 여의도역에서 9호선으로 환승해 국회의사당역에서 해산했다.

또 다른 팀은 4호선 삼각지역에서 사당역으로 이동해 2호선으로 환승,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이동해 시위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이동 경로에 있는 역에서 하차 및 승차를 반복하기도 했다. 때문에 한 승강장에서 최대 11분까지 지하철이 출발하지 못하고 머물렀다.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자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던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숙대입구역에서 한 20대 남성 승객은 박 상임공동대표에게 "매일 세균



열심히 내는 시민들 방해한다"며 "기득권은 다 차를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 운행 방해해서 뭐가 좋은가"라고 소리쳤다.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의 한 남성 승객은 "왜 여기서 이리하는 거냐. 경비행기나 우주선이라도 만들어서 보급해야 하나"며 "왜 생업이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다. 다시는 지하철에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남성 승객은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하차한 뒤 다시 탑승하려는 이형숙 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의 휠체어를 몸으로 막은 채 "못 지나간다. 나도 여기서 있을 게 아닌가 봐. 맨날 지하철 운행 막고 지연시키는데, 내가 여기 있는 한 탈 수 없다"고 고함쳤다.

권 상임공동대표는 국회의사당역에서 김재환기자



나주 금성지구대, 추석 전 협력단체 합동 안심순찰

나주경찰서 금성지구대(대장 김진희)는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중앙자율방범대·경찰 등 30여 명이 함께 야간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순천경찰, 추석명절 전통시장 집중순찰활동 전개

순천경찰서(서장 김중호)는 순천의 대표 전통시장(아랫장)을 찾아 형사·교통·지역경찰과 합동으로 가시적 도보 순찰 활동을 전개하며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범죄피해사례 및 예방법에 대한 홍보를 펼쳤다.

순천=김승호기자



여수소방·여수시 의용소방대, 포항 수해복구 지원활동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와 여수시 의용소방대는 태풍'힌남노'로 최악의 수해를 겪고 있는 포항 복구활동을 위해 여수소방서직원과 의용소방대원 50여명을 긴급 동원하여 수해지원에 나섰다.

여수=기동취재본부



장흥소방, 기관장과 함께하는 생활안전 서비스 실시

장흥소방서(서장 신항식)는 '기관장과 함께하는 날'을 맞아 장흥읍 향양1구 마을을 방문하여 장흥소방서장과 119생활안전순찰대가 함께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점검과 생활안전서비스 등을 실시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광양소방서 구급대회 선수단, 경연대회 시상금 전액 기부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제4회 대한민국 119구급활동 경연대회 시상금 전액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광양=기동취재본부



광주 동부소방, 전통시장에서 캠페인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는 광주 동구 전통시장인 대인시장에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및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을 함께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전남, "최근 10년간 특별교부세 전국 세번째로 많았다"

전남 1조 1995억대...경기·경북 이어 3위

최근 10년간 전남이 전국 지자체 중 세번째로 많은 특별교부세(특교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경주 상당구)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전남도가 받은 특별교부세는 1조1995억3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특별교부세

규모가 세 번째로 크다.

반면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같은 기간 특교세 4054억2500만 원을 받아, 전국 13위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는 경기(1조6837억3500만 원)가 특교세를 가장 많이 받았다. 경북(1조3266억2900만 원), 전남(1조1961억9000만 원), 강원(9807억5700만 원), 서울(9610억98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4가지

가운데 하나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재정 균형을 위해 자치단체별 재정력에 따라 국세 중 일정액을 배정한다.

총액은 국회가 정하지만 지역별 배분은 행정안전부가 결정한다.

정 의원은 경기도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특교세를 가장 많이 받았으며, 편중 현상을 주장했다. 특히 경기 지역 재정자립도가 올해 기준 61.6%로 전국 지자체 중 상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유나기자

정 의원은 "수도권은 인구·예산이 많은 만큼 교부세 사업도 많다. 정부 관심 역시 클 수밖에 없다"면서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특교세가 집중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특교세는 지역별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시급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때 교부한다. 해마다 주요 사업 현안에 따라 변동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유나기자



추석 명절 끝 '다시 일상으로'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된 13일 오전 출근 시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명박 前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예정... "건강상 사유"

오는 27일 종료...이번 주말 신청 예정

다스(DAS) 실소유 의혹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주말 형 집행정지를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이 전 대통령 측 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건강상 이유로 이번 주말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3개월 일시 석방됐다. 형집행정지는 오는 27일 종료된다.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이 전 대통령은 6월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조치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형집행



정지를 한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최이슬기자